

□ 정부시책 및 동향 □

## 산업자원부, 시험소 상호인정협정 확대

내년부터 시험소 상호인정협약이 전세계로 확대, 무역상 기술장벽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지난달 20일 개최된 국제시험소인정기구(ILAC) 총회에서 아·태시험소인정기구(APLAC)와 유럽인정협력기구(EA) 양대 지역기구간 신뢰성을 구축, 내년 6월까지 전세계적으로 단일한 상호인정협약을 체결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를 통해 국가간 무역기술 장벽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복 시험을 줄임으로써 수출기업의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하게 됐다. 또 우리나라 시험성적서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으로써 수출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는 것.

전문가들은 시험소 상호인정협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시험 방법과 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술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표준원에서 공인한 국내 시험기관 88개 가운데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해 수출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기관이 상당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준원은 국내 기관들의 기술 수준을 제고하는 동시에 11개 부처 48개 개별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규제 분야 시험검사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국가 신인도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일환으로 표준원은 각 정부기관이 시험, 검사, 시스템 및 제품 인증 관련 제도를 빠른 시일내 도입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산업자원부, '산업자원통계' 사이트 주요자료 분기별 정리

수출입 거래를 하다보면 무역관련 통계가 필요할 때가 있다. 과거엔 통계하나 구하려면 도서관을 뒤지는 등 별도의 수고를 해야 했지만 요즘은 인터넷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다. 관세청이나 한국무역정보통신의 KTNET, 무

역협회의 KOTIS 등에서 무역관련 전문통계가 공급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은 사이트 가운데 수출입 관련 통계는 물론 산업 등과 관련된 다양하고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다.

산업자원부 사이트중 '산업자원통계'(http://www.mocie.go.kr/산업자원통계/통계목록.htm) 코너가 그것이다. 산업자원부의 주요 통계 및 관련자료를 분기별로 종합·정리한 것으로 향후 월 단위로 통계가 제공될 예정이다.

'산업자원통계'는 △수출입실적, 설비투자동향, 통화 금리 환율 주가 등의 기본통계 △지역별 품목별 수출입실적, 한국의 해외투자 등의 무역투자·국제협력 △자원·에너지 △산

업·기술정책 △섬유, 신발, 석유화학, 철강, 일반기계 등 산업별 동향 등 총 5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어 해당 항목을 클릭하면 바로 통계가 화면에 나타난다.

이밖에 산업자원부의 홈페이지에서 정보자료실-국가별정보를 클릭하면 주요 50개국의 경제현황,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관계(교역·투자·산업협력 등), 통상현안 및 협력방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산업자원부, IEC 상임국으로 피선 발표

지난달 28일 개최된 제63차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상임위원회 위원국으로 선출됐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가 전기전자분야 국제표준제정기구인 IEC 최고정책기구인 상임위원회 위원국으로 처음으로 선출됐으며 지난 '97년

진출한 이사회 이사국으로 재선임됐다고 31일 밝혔다. IEC는 ISO(국제표준화기구), ITU(국제통신연합)과 함께 세계 3대 국제표준제정기구의 하나로서 지난 1906년 최초로 설립된 이후 전기전자분야에 관한 국제표준 제정 활동을 관장하고 있다.

## 중소기업청, Y2K 자체인증기업에도 컨설팅 지원

중소기업청 Y2K 비상종합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스스로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이상이 없음을 스스로 인증하는 자체선언 등에 대해서도 컨설팅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

로 했다. 또 Y2K 문제 발생잠재성이 비교적 높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00년 첫 출근 당일 설비 및 시스템 가동시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키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30일 '2000년 중소기업 Y2K 비상종합지원계획'을 마련, 지나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계획에 따르면 11월부터 연말까지는 '중소기업 비상 사전 지원전략'을 수립, 2000년으로 시스템의 날짜 표기를 전환한 후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모의시험을 실시기로 했다. 또 Y2K 해결을 자체선언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컨설팅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12월 31일부터 2000년 1월 5일까지는 '2000년 전환기의 비상지원전략'을 마련, 2000년 전환기 동안 중앙 및 지방 비상지원반, 유관기관 지원반을 24시간 비상지원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Y2K 문제는 해결했으나 문제 발생잠재성이 비교적 높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00년 첫 출근 당일 설비

및 시스템 가동시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하기로 했다. 2000년 1월 5일 이후에는 '사후 비상지원전략'을 세우고 Y2K 문제가 발생한 기업의 비상긴급지원을 위한 신고센터를 지방중기청에 설치·운영기로 했다. 신청 접수된 문제기업에는 SI전문기술자 100명을 현장에 파견, 무상으로 응급복구지원을 하기로 했다.

미복구 또는 해결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Y2K 문제가 없는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기업당 2500만원 한도에서 무상으로 시스템 대체 컨설팅을 실시기로 했다. 한편 중기청은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 대전, 광주, 부산 등 전국 10개 지역을 순회하며 '중소기업 비상계획수립지원을 위한 순회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 중소기업청, '中企 해외규격인증 지원사업'

중소기업청은 IMF이후 내수 위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전환하는 한편 L/C개설, 원자재 구매자금지원 등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인증마크를 획득치 못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해외 규격인증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

당되는 기업으로 인증신청(예비신청), 기술지원(컨설팅), 제품시험분석 및 수정·보완, 공장심사비용 등 인증획득비용의 70%까지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인증분야는 CE(유럽공동체), NEMKO(노르웨이), SEMKO(스웨덴), TUV/VDE(독일), UL/ETL/FCC/QS-9000(미국), CSA(캐나다), GOST(러시아), CCIB(중국), JIS/T(일본) 등이다. 중소기업이 각

지방중기청에 신청하면 본청에서 심사·선정하게 된다. 선정이 되면 중소기업과 지원기관, 중기청이 약정을 체결하게 되고 이때 중기청이 착수금 35%를 국고로 지원해 준다. 이후 해외인증을 획득하면 잔여금 35%를 지원하게 된다.

중기청에 따르면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해 수출길이 막혔던 중소기업이 정부의 지원으로 인증마크를 획득, 올해 상반기 중에만 약 3억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업체가 획득한 해외인증마크

는 CE가 118개로 가장 많았고 UL 30개, QS-9000 23개 순으로 나타났다. 또 수출효과를 보면 조사대상 200개 업체중 78%인 156개 업체가 2억940만달러를 신규로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그 동안 대만 등지로 부터 수입에 의존했던 전기·전자 등 기초부품에 대한 인증마크 취득으로 수입대체효과도 거뒀다.

중기청은 올해 해외인증획득 지원과 관련한 정부예산 58억원을 내년에는 83억원으로 늘려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청, 불량률 '10만분의 1' 운동 추진

내년부터는 불량률 1만분의 1 추진운동이 10만분의 1로 한차원 높게 전개된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95년부터 전개해오던 100PPM 품질인증요령을 싱글(Single)PPM 품질인증요령으로 개정 새로운 품질인증요령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싱글PPM 품질인증요령은 지금까지 제품의 불량률을 만의 하나 이하로 관리하는 수준에서 십만에 하나 이하로 한차원 높은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품질인증 시스템이다.

중기청은 중소기업들이 지속적인 품질인증 운동 추진으로 세계 일류의 품질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품질인증기준을 정하고

기술지도·교육 및 인증업체에 대한 지원내용을 보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우선 100PPM 품질혁신운동을 싱글PPM 품질혁신운동으로 전환·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품질기준인 싱글PPM 품질인증기준이 제정됐다. 또 싱글PPM 품질인증제도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심의와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싱글PPM 심의위원회가 설치됐으며 인증 심사절차 간소화 및 업무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신청기관의 추진본부를 이관했다. ISO와 QS9000 등의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한 현지심사도 일부면제 됐으며 품질혁신상 수상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심사도 1회 면제됐다.

## 특허청, 특허·상표권 이전등록 신청서류 간소화

이사와 회사간 거래에 있어서 특허권 이전 등록 신청시 제출토록 되어 있는 이사회승인서가 이달부터 폐지된다.

특허청은 11월 3일 지난 20년간 지속되어 온 특허권·상표권 이전등록신청 구비서류를 간소함으로써 이사회승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특허권 이전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벤처기업확인이나 은행융자신청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특허기술사업화를 촉진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은 사유재산권의 일종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하지만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려면 이전등록신청서에 양도

증과 인감증명서, 제3자의 인가·동의·승인서를 첨부해 제출토록 되어 있다.

그간 회사소유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사장명의로 명의 변경하거나 회사 사장 개인소유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회사로 이전하여 법인의 벤처기업확인서나 은행융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제3자의 인가·동의·승인서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이사회승인서(회사의 정관, 이사의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을 포함)를 제출하지 않아 이전등록신청서가 수리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한편 산업재산권의 이전등록건수는 '97년 6275건, '98년 1만2752건이며 '99년 10월 말 현재는 1만3540건을 기록, 전년동기대비 3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관세청,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앞으로 수출신고 정정·취하의 신청은 전자 문서로 해야 한다. 또 정정·취하 신청건의 처리는 화면 심사후 처리, 서류심사후 승인으로 분류되며 화면 심사후 승인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세관에 나갈 필요가 없어진다.

관세청은 EDI 수출신고 정정·취하업무의 전산화에 따라 관련규정인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세관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받을 때 신고인 날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 수출신고필증을 발행·교부하고자 할 때 '본 신고필증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P/L(Paperless의 略記; EDI를 통한다는 뜻) 신고를 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된 것을 확인하여 발생·교부 됨'이란 신고인 날인을 반드시 받아야 했다.

다시말해 수출신고필증 교부시 신고인 날인 제도가 폐지된다는 것.

또 서류없이 EDI 방식으로 수출신고를 마치고 난 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전산으로 수출신고를 했을지라도 수출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신고번호 순으로 보관하고 1개월 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산으로 신고된 내용이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 전산매체에 의해서 보관되기 때문에 수출기업들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수출신고 정정·취하의 신청은 전자문서로 해야 한다. 다만 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료는 서류신청도 가능하다.

정정·취하 신청건의 처리는 화면심사후 승인과 서류심사후 승인으로 분류하여 화면심사후 승인은 신청인이 세관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

또 수출신고 정정·취하승인이 전산통보 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정정·취하승인서를 자체 발급할 수 있다.

하지만 서류심사후 승인건에 대해서는 세관처리 담당자가 제출 받은 승인(신청)서에 처리담당자의 인장을 날인한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수출신고서 작성요령도 보다 간단 명료해진다.

수출물품의 품명·규격 작성요령의 상세한 규정 및 신고서 작성요령이 보완됐다. 원상태 물품을 단순대행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위탁자도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수출위탁자를 제조자란에 기재할 수 있도록 됐다.

일반우체국에서의 수출물품 우편발송확인 및 선(기)적 등록절차 규정도 정비됐다.

기존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통관우체국의 세관공무원에게 현품 및 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출해 우편발송 완료 여부를 확인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통관우체국장에게도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출통관시 애로사항도 일부 개선된다. 수출신고인이 폐업 등의 사유로 신고서를 보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되고 외국무역선(기)이 국내 수리후 항만에 입항한 경우에는 입항보고서를 확인하여 선적등록을 할 수 있다. 또 휴대탁송물품에 대한 선(기)적 내용 등록오류 발생시 선(기)적 내용 정정 등에 대한 조치를 세관장이 하도록 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공사대금지급개선방안' 마련

앞으로는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공사 발주기관은 공사 대금을 원사업자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원사업자도 대금으로 받은 비율 이상으로 하도급업자에게 현금을 주도록 공사계약서에 명시하게 된다.

또 공공공사 발주기관이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결제방식도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들에서도 공사 대금의 어음결제 비중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공사대금지급 개선방안'을 마련, 11월 3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공공기관들과 공사를 계약한 원사업자들에 대해 현금을 받은 비율 이상으로 하도급업자들에게도 반드시 현금을 주겠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담도록 유도키로 했다.

또 현재는 원사업자가 부도·파산한 경우 등에만 발주 공공기관이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불하던 것을 일상 지불에도 확대하도록 권장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원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는 이 사실을 하도급업자에게도 미리 통보해 주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4월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 비율 이상으로 하도급업자에게도 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아직 위반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와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한전, 도로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진흥공사와 한국통신, 가스공사, 송유관공사, 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고속철도건설공단 등 정부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등 1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중 원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의 93.3%를 현금으로 주었지만 현금을 받은 원사업자들은 이 중 33%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어음으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 재정경제부, 정부투자기관회계 규칙·기준 공포

한국전력이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 물품 경쟁계약 낙찰자 결정시 적격심사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자회사와의 수의계약 요건도 강화된다.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과 정부투자기관회계기준을 제정, 지난 10월 21일 공포했다.

재경부는 규정이 200조가 넘는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을 폐지하고 회계관련 세부사항을 담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을 신설,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토록 했다.

이에따라 한전은 그동안 정부투자기관회계 규칙 제정이 늦어져 시행을 미뤄왔던 적격심사를 10월 21일을 기준으로 수의계약대상 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나 용역계약, 2억원, 이상 물품계약 분야까지 확대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폐지요구로 관심을 끌

었던 자회사 수의계약은 정부 경영혁신정책에 따른 위탁업무, 설비 유지관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특정기술보호 육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했다.

한전 계약부서의 한 관계자는 “조달청 등 정부기관의 기준을 준용해 해당 공사별로 주관부서의 계약부서와 협의해 적격심사 기준을 새로 만들 계획”이며 “새로 개정될 적격심사 기준은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공사는 기술, 경영부문 등 적용항목을 대폭 간소화하고 상대적으로 추정가격이 큰 공사는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등 심사항목별로 배점을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정 후속조치로 회계규정시행규칙, 계약업무처리요령,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특례 등 관련사규의 제·개정을 추진, 11월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 생산기술연구원, “공용실험실 이용하세요”

생기원은 중소기업들이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대단위 공용실험실을 구축, 자사의 연구실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

하고 있다. 현재 소성가공, 용접에서부터 세라믹·분말성형, 환경, 냉동공조, 음향·진동 등에 이르기까지 산업분야별로 중소기업이 보유



하기 어려운 측정·시험검사 등의 연구 및 실 직접 지원하고 있다.<실험실 이용문의 :  
 협잡비를 개방하고 중소기업 현장애로기술을 0417-5608-114>

▲ 소송가공 공용실험실=압출, 단조, 프레스, 압연 및 금속분말 성형 등

- 주요 구성장비

장 비 명	SPEC	용 도
정수압 압출기	600톤(시편 $\phi$ 90mm)	온·열간 정수압압출
유압프레스	200톤	판재성형
압연기	$\phi$ 110×150mm, 20톤	압연
Atomizer	35kg/1500℃.(Air, N <sub>2</sub> )	금속분말제조
분말성형기	30톤 분말성형	분말성형
회전분말 단조기	50톤	분말단조
가열로	Max 1200℃	온·열간 가열용
연속 열처리로	1200℃, 분위기, 연속	연속열처리

▲ 용접 공용실험실=용접기, 용접재료, 용접 Fume, 용접부위 물질평가 및 FCA 용접재료 생산라인

- 주요 구성장비

장 비 명	SPEC	용 도
고속카메라	1000f/s	용접기자재 평가
PORTABLE ARC MONITORING SYS	2000A	용접기자재 평가
WELDING POWER SOURCE(MIG/TIG)	Max600A/Max500A	용접기자재 평가
FCA 용접 재료 생산라인	30m/min	용접재료생산
용접품 측정장치	용접품(g)/min	용접품 발생량 측정

▲ 세라믹·분말성형 공용실험실=플라스틱 소재 가공, 분석 실험 및 고분자재료 합성 실험

- 주요 구성장비

장 비 명	SPEC	용 도
Spray Dryer	Dia. 1700mm, atomizer	분말공정장비
Attritor	순환식 15 l	분말공정장비
Fludized zone mixer	20 l	분말공정장비
Autoclave	10kg/cm <sup>2</sup> , 750D×730L	분말공정장비
Granule M/C(원료공급장치 포함)	Pan dia	성형공정장비
Ceramic kiln	30 tons	성형공정장비
고정밀수동 Printer	300×300mm	가공공정장비

▲ **환경공용실험실**=환경에 따른 영향 평가, 감성공학이 필요한 산업분야에 활용

- 주요 구성장비

장 비 명	SPEC	용 도
Environmental Chamber	VCZ-305S	인공환경에 따른 제품 테스트

▲ **냉동공조 공용실험실**=냉동공조기기 성능시험·분석을 통한 신뢰성 확보 및 성능향상도모

- 주요 구성장비

장 비 명	SPEC	용 도
에어컨 성능시험장치 Psychrometric Calorimeter	1000 - 9000kcal/h	가정용 냉난방기 성능시험
열교환기 성능시험장치 Heat Exchanger Test Equipment	10RT	공기열원 열교환기 성능시험
냉각탑 종합성능시험장치 Cooling Tower performance test Equipment	20RT	냉각능력시험
축열시스템 성능시험장치 Thermal Storage System Test Equipment	30 - 50kW	축열성능시험
풍동 Aerodynamic test Wind Tunnel	0.5 - 50m/s	Duct기구 성능 및 압력강하시 험

## 한국표준협회, 국가사업표준정보 종합서비스시스템 가동

한국표준협회(회장 정몽구)가 국가산업표준 정보 종합서비스시스템(standard. ksa. or. kr)을 개발하고 11월부터 본격 가동한다. 각종 산업규격을 인터넷을 통해 직접 열람하거나 구입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한국산업규격(KS)은 기본, 기계, 전기 등 16개부문 1만 1,000여종으로 A4용지 15만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따라서 이를 사용하는 기업체에서 보관이나 관리뿐만 아니라 구입에

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11월부터 표준정보 인터넷 서비스가 이뤄지게 되면 컴퓨터상에서 규격번호와 검색어 등을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도 구입이 가능하게 됐다.

협회는 이와 함께 해외규격에 대한 목록검색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어서 수출을 추진하는 기업체들이 관련정보 취득은 물론 검색한 해외규격의 표준협회 소장여부를 알 수 있

어, 인터넷 주문도 가능해졌다. 현재 검색 가능한 해외규격은 국제규격(ISO, IEC), 지역규격(EN), 국가규격(BS, ANSI, JIS, DIN), 단체규격(API, ASTM) 등 10개기관 14만 여종이다.

이밖에 기타의 부가서비스로 KS 심사기준, 인증업체 관련정보, 산업표준화관계법규 및 해설집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 對日 부품수출 확대 청신호

KOTRA 주관으로 지난 10월 26~28일 도쿄 Big Sight 전시장에서 개최된 '99 도쿄 한국부품산업전에 국내 116개사가 참가해 총 상담건수 2,120건, 계약성과 553만달러, 상담액 1억5천만달러의 성과를 거두는 등 부품류 일본 수출전망을 밝게 했다.

한국부품산업전은 한·일 양국 중소기업간의 산업협력 기회 제공을 위한 통상협력사업으로 지난 '95년부터 개최돼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성과가 확대되고 있다.

내방객들의 편의 도모와 상담성과 제고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올해는 도쿄 시내에 위치한 도쿄국제전시장(Big Sight)으로 장소를 옮기고, 전시면적도 2배 이상으로 늘렸다.

또한 전시기간중 일간공업신문사 주최의 국제로봇트전시회, 부품공급장치전시회, 일본첨

단재료전시회, 국제신기술박람회 등 7개 전문 전시회가 병행 개최됐는데, 등록바이어수는 전년대비 89% 늘어난 2,987명에 달했다.

산업자원부, 일본 통상산업성, JETRO 등 18개 기관이 후원한 '99 도쿄 한국부품산업전에는 전기·전자분야 40개사, 기계분야 15개사, 금형·금속분야 29개사, 자동차·화학분야 18개사 등 부품류 전반에 걸쳐 총 116개 한국의 유망 중소기업이 참가했다.

올해 전시회에서는 설계도면을 제시하면서 견적을 요청하거나 OEM형태의 공급을 희망하는 사례가 많았다.

부품조달과 연계된 투자 및 기술협력에 관심을 가진 기업들도 다수 있었으며, 품질과 기술은 물론 가격면에서도 경쟁력을 평가받아 10만달러 이상의 시제품을 즉석 주문하는 사례도 눈에 띄었다.

대일 수출이 활발한 금형·금속분야는 이번 전시회 기간중 462건의 상담을 통해 2,348만달러 상담성과를 거두었는데, 품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우수하다는 평을 받았다.

정밀주조품을 출품해 총 44개사와 상담을 진행한 H사는 대일 진출기반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전시회에는 차세대 이동통신용 안테나, 컴퓨터 등 신기술을 보유한 14개사의 벤처기업이 참가해 한국의 기술 우수성을 홍보

했으며, 경기도 등 11개 지방자치단체, 투자전문컨설팅 5개사, 외국인 투자지원센터(KISC) 등이 참가해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했다.

한·일 양국간의 교역 불균형 해소와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개최되는 한국부품산업전은 매년 개최성과를 높여가고 있으며, 일본의

부품시장을 뚫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독특히 하는 명실상부한 한국 대표전시회로 정착해가고 있다.